

지지 정당의 차이에 따른 규제 인식 차이 연구

Analysis on the Differences of Regulation Recognition according to Political Party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Seong-Rak Choi(haihabar@gmail.com)

요약

현대 국가는 정당 국가이다. 따라서 사회의 주된 영향 요소 중 하나가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당 간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지 정당에 따라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 유형 중 하나인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당 간 차이가 논의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규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규제 차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규제도 정부의 행위로서 정치적 인식에 따라 규제를 받아들이는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에서 지지 정당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결과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긍정성, 규제의 사회적 효과, 규제의 국민에 대한 기여도 등과 관련해서 여당 지지자가 야당 지지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규제에 대한 신뢰도,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효율성, 규제의 공정성, 규제의 문제 해결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는 여당 지지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야당 지지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정부 규제는 정치, 정당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서 정치 및 정당과 상호 연관되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 중심어 : | 규제 | 규제 인식 | 정당 | 지지 정당 | 인식 차이 |

Abstract

Party is the main factor in modern country. Therefore, there are a lot of articles about the difference of public policies and citizen's recognition according to their supported party. However, there is few research about the regulation recognition according to citizen's supported party.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erences of a regulation recognition according to citizen's supported party.

In result,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of regulation recognition according to citizen's supported party. The people who support Saenuri Party have a positive recognition about a necessity of regulation, a fairness of regulation, a reliability of a regulation. But the people who don't support Saenuri Party have a negative recognition about those. In Korea, government regulations have a lot of relationship with a party and politics.

■ keyword : | Party | Political Party | Regulation | Regulation Recognition | Supported Party |

* 본 연구는 2015년도 동양미래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6년 03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4월 29일

수정일자 : 2016년 04월 29일

교신저자 : 최성락, e-mail : haihabar@gmail.com

I. 서론

현대 국가는 정당 국가이다. 따라서 사회의 주된 영향 요소 중 하나가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정당은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이를 반영한 정부 정책을 제정, 집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국가의 주요 정책은 정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수 정당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나 발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 정당의 경우에는 국민 복지를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보수 정당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책에 보다 더 민감하며, 진보 정당은 온난화와 같은 지구적 사안에 대해 보다 더 반응한다는 특성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정당 간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지 정당에 따라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 유형 중 하나인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당 간 차이에 대한 것이 강조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한국에서 규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모두 규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여부에 상관 없이 규제는 경제 개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규제 혁신,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규제 이론 내에서는 어떠한 규제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고 있으며 규제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과연 규제가 정치와 특별한 연관성이 적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할 수 있다. 규제도 정부의 주요 정책의 일부이며, 시민들이 규제에 대한 인식도 다른 정부 정책과 같이 지지 정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규제 논의에서 합리성 등만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규제의 정치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에서 지지 정당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규제에 대하여 정치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연구는 규제의 성격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대 국가는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 국가의 특성을 지닌다.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 정당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진다. 사회에는 사회 내 각각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존재하고[1], 시민들은 자기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따라서 어떤 이익, 이념에 따라 지지 정당이 결정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정상화(2000)은 미국에서 종교가 지지 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가톨릭교도 여부에 따라 지지 정당에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2].

김동영(2000)은 미국 남부에서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분리 투표¹⁾ 여부가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분리 투표는 정당 결속력을 약화시켜서 남부 백인들의 공화당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3].

그리고 이효성·허경호(2004)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집권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며,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 집권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낮아졌다[4].

김희정(2005)은 서울에서 주택 재개발을 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주택 재개발 이후 해당 지역의 정당 지지도가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택 재개발은 주민들의 구성을 변화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지역의 정당 지지도 달라진다고 보았다[5].

또한 이효성(2006)은 시민들이 신문을 이용하느냐 여

1) 미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투표와 의원에 대한 투표는 보통 같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분리 투표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투표와 의원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시행한다.

부에 따라 정당 지지에 영향이 있다고 보았다. 신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변인과 상호작용을 하여 정당 지지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도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파악되었다[6].

이갑윤·박정석(2011)은 정당 간 정책 차이보다 지역민의 호감도가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정당 간 정책 차이는 지역민의 호감도와 무관하여 정당 지지에서 정책 차이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7].

그리고 이세희·이종균(2013)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사용이 한국에서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SNS를 많이 사용할 경우 한나라당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주당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8].

2. 지지 정당 차이에 따른 인식 차이

정당 지지에 대한 연구에는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뿐 아니라 지지 정당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과관계를 주장하지만, 지지 정당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 차이 연구는 명확한 인과관계보다는 시민들의 지지 정당 차이에 따라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현상 자체를 중시한다.

먼저 김영태(2003)은 독일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구조적 평등, 탈물질주의, 종교에 대한 관념 등에 대해 독일 시민당 지지자, 자민당 지지자, 녹색당 지지자, 민사당 지지자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9]. 그리고 이현출(2004)는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시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1].

박기목(2005)은 대통령 탄핵, 박근혜 바람, 노인 폄하 등 연구 당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0].

서현진·정진민(2006)은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

지 정당의 차이에 따라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 유권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사형제, 낙태, 동성애자 군입대, 사회보장정책, 소수자 우대 정책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지 정당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11].

강경태(2006)은 호주를 대상으로 호주의 정당인 노동당, 자유국민연합, 녹색당 등 지지 정당에 따라 테러, 국방, 이라크 문제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실업, 물가, 국가 경제 평가 등에 대해서도 지지 정당에 따라 시민들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12].

또한 진영재·김민욱(2007)은 지지 정당에 따라 대북 지원 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경우 대북지원 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인식했다[13].

김상돈(2011)은 한국종합사회조사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 정당에 따라 국정 운영 평가,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도, 정치 항의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지 정당에 따라 국정 운영 평가, 국가 기관 불신도 등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야당 지지자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낮았으며, 국가 신뢰도도 떨어졌다[14].

그리고 지병근(2014)는 지지 정당 여부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정책적 이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15], 윤종빈·정희옥(2014)는 이념에 대한 태도와 견해가 지지 정당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미국 등에서는 지지 정당에 따라 이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당 지지 차이에 따라 이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16].

3. 정당과 규제에 대한 연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지지 정당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여부를 검증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지 정당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 차이에 대한 것은 주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것이 연구되었으며, 규제 등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규제를 하는 동기는 일반적으로 합리적 행동 이론에 기반한다[17]. 기존의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시민들의 유인을 조정하여, 규제를 순응할 경우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든다. 합리적 행위를 하는 시민들이 규제를 준수할 때 보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좋은 규제에 인정된다.

이러한 규제 이론에서는 규제의 정치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규제는 합리적 행동 이외의 측면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최성락(2016) 연구에서는 규제가 연령별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논의하면서, 나이가 많을수록 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며 젊을수록 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18]. 그리고 규제자인가 규제 대상자인가에 따라 규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한다[19].

정부 규제는 어느 정부에서든 규제 개혁을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에 대해 중립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규제는 정치적 주요 사안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는 합리적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 등의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규제가 정치적 행위의 일종이라면 규제의 도입 여부, 집행, 평가도 집행 정당의 여부, 정치적 견해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규제는 일반적으로 합리성 등을 중시하는데, 규제가 정치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규제의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도 정당의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 시민들이 지지 정당에 따라 규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정부 규제의 정치적 특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III.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지 정당별로 규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규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20]. 특수한 영역마다 규제의 필요성, 근거, 규제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21], 하나의 개념으로 규제의 특성을 논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규제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제의 세부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규제 일반적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인식, 규제의 집행과 내용에 대한 사항 등 규제의 일반적 사항을 바탕으로 규제에 대한 지지 정당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인원은 1,000명이었으며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을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법이였다.

조사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 응답자 기본통계

구분		응답수	%
성별	남성	504	50.4
	여성	496	49.6
연령대	20대	226	22.6
	30대	268	26.8
	40대	281	28.1
	50대	225	22.5
학력	초등학교 졸업	2	0.2
	중학교 졸업	3	0.3
	고등학교 졸업	197	19.7
	2-3년제 대학교 졸업	175	17.5
	4년제 대학교 졸업	553	55.3
대학원 졸업 이상	70	7	

IV. 연구 결과

1. 정부에 대한 인식

규제에 대한 지지 정당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등에 대한 지지 정당 간 차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정부 인식 차이분석 결과(정당 비교)

구분	평균	표준 편차	분산분석		차이분석		
			f값	유의 수준	t값	단측	
시장 보다 정부 우위	새누리	4.81	1.25	1.03	0.312	1.01	0.156
	새누리 외	4.67	1.39				
기업 보다 정부 우위 (경제활동)	새누리	5.07	1.22	17.64	0.000	4.19	0.000
	새누리 외	4.55	1.30				
정부 신뢰	새누리	5.01	1.28	133.32	0.000	11.48	0.000
	새누리 외	3.29	1.71				
정부 문제 해결성	새누리	4.91	1.23	80.21	0.000	8.93	0.000
	새누리 외	3.71	1.47				
정부 전문성	새누리	4.94	1.27	74.85	0.000	8.63	0.000
	새누리 외	3.78	1.46				

정부에 대한 인식 정당별 차이분석 결과, ‘시장보다 정부 우위’ 문항의 경우 새누리당 지지자의 평균은 4.81, 새누리 외 정당 지지자의 경우 평균 4.67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 0.156로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또한 유의수준 0.312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시장보다 정부가 우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에서 정부와 기업 간 역할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지지자가 새누리 외 정당 지지자들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당 지지자 및 야당 지지자 모두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았으나 여당 지지자들의 정부 역할 응답 평균이 더 높았다.

정부 신뢰, 정부의 문제 해결성, 정부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새누리 외 정당 지지자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7점 척도에서 4점이 중립적 응답인데,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들은 모두 3점대로 부정적이었다. 야당 지지자들은 정부 신뢰 등과 관련해서 여당 지지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에 대한 인식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외 정당 지지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권은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으므로, 집권 정당 지지자는 정부를 긍정적으로 보고,

집권 정당 비지지자들은 정부를 보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업에 대한 인식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지 정당 간 차이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기업 인식 차이분석 결과(정당 비교)

구분	평균	표준 편차	분산분석		차이분석		
			f값	유의수준	t값	단측	
기업 신뢰	새누리	4.26	1.36	45.77	0.000	6.751	0.000
	새누리 외	3.30	1.52				
기업 문제 해결성	새누리	4.74	1.19	38.3	0.000	6.167	0.000
	새누리 외	3.94	1.43				
기업 도덕성	새누리	3.89	1.33	19.71	0.000	4.433	0.000
	새누리 외	3.29	1.43				
기업 국민 삶에 기여	새누리	4.61	1.32	39.18	0.000	6.243	0.000
	새누리 외	3.74	1.51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	새누리	4.57	1.29	54.85	0.000	7.388	0.000
	새누리 외	3.57	1.46				

기업에 대한 인식도 지지 정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기업 신뢰, 기업의 문제 해결성, 기업이 국민 삶에 기여하는지 여부, 정부가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외의 정당 지지자들은 이러한 문항에 대하여 4점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차이분석, 분산분석 모두 지지 정당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기업의 도덕성 부문에서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비지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위 정부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면, 새누리당 지지자는 정부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새누리당 비지지자는 정부, 기업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산업발전 등을 추구하면서 친기업적 정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정부 지지자들

은 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자 모두 기업보다는 정부를 보다 더 신뢰하고 있다는 특성도 존재한다.

3.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인식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과 관련하여 지지 정당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규제 필요성 및 정당성 인식 차이분석 결과(정당 비교)

구분	평균	표준 편차	분산분석		차이분석		
			t값	유의 수준	t값	단측	
규제 필요성	새누리	5.34	1.06	12.08	0.001	3.470	0.000
	새누리 외	4.96	1.15				
규제 긍정성	새누리	4.74	1.17	8.11	0.005	2.845	0.002
	새누리 외	4.41	1.23				
규제의 사회적 변화 효과	새누리	5.17	1.04	21.93	0.000	4.673	0.000
	새누리 외	4.66	1.16				
규제 국민 삶에 기여	새누리	4.86	1.13	31.8	0.000	5.622	0.000
	새누리 외	4.18	1.32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지지 정당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4점대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들보다 더 높은 긍정성을 보이고 있다. 규제 필요성, 규제 긍정성, 규제의 사회적 변화 효과, 규제의 국민 삶에의 기여 등 모든 항목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새누리당 지지자,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들 모두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규제를 보다 더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 지지자들이 정부의 정책의 일종인 규제의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정부 활동에 대해 호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규제의 집행에 대한 인식

규제 집행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지지 정당 간 차이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규제의 집행 인식 차이분석 결과(정당 비교)

구분	평균	표준 편차	분산분석		차이분석		
			t값	유의수준	t값	단측	
규제 우위성 (시장보다)	새누리	4.82	1.10	11.15	0.001	3.331	0.000
	새누리 외	4.44	1.23				
규제 준수성	새누리	3.96	1.44	1.74	0.188	1.321	0.094
	새누리 외	3.78	1.33				
규제 문제 해결성	새누리	4.36	1.30	24.81	0.000	4.969	0.000
	새누리 외	3.68	1.47				
규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	새누리	4.87	1.09	39.21	0.000	6.243	0.000
	새누리 외	4.14	1.27				
개인 자유 희생 가능 (국가이익 위해)	새누리	4.83	1.14	54.46	0.000	7.360	0.000
	새누리 외	3.94	1.31				

규제의 우위성, 규제에 대한 국민의 협력 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나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나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자가 이에 대해서 긍정하는 정도가 더 컸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규제가 시장기능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규제집행 등에 대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들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사람들이 규제를 잘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나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나 모두 부정적으로 보았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3.96,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는 3.78로 4점 이하의 응답이 나왔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점수가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 간 차이 없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규제의 문제 해결성, 국가를 위해 개인 자유 희생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데 반해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들은 규제가 필요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집행 과정에서 사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국가 이익을 개인 이익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새누리당 지지자와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새누리당은 현재 정권을 지니고 있는 수권 정당이며,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이러한 수권 정당의 집행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정권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권의 집행 능력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5. 규제의 내용에 대한 인식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 지지 정당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규제의 내용 인식 차이분석 결과(정당 비교)

구분	평균	표준 편차	분산분석		차이분석		
			f값	유의 수준	t값	단측	
규제 신뢰	새누리	4.36	1.16	38.30	0.000	6.162	0.000
	새누리 외	3.55	1.46				
규제 전문성	새누리	4.55	1.23	19.04	0.000	4.351	0.000
	새누리 외	3.98	1.43				
규제 효율성	새누리	4.41	1.32	16.34	0.000	4.037	0.000
	새누리 외	3.86	1.41				
규제 공정성	새누리	4.45	1.29	33.44	0.000	5.774	0.000
	새누리 외	3.68	1.39				
규제 도덕성	새누리	4.40	1.24	25.72	0.000	5.055	0.000
	새누리 외	3.72	1.46				

규제의 내용에 대한 문항에서는 모두 새누리당 지지자는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고, 새누리 이외 정당 지지자들은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규제에 대해서 신뢰하는지, 규제 내용에 전문성이 있는지, 규제가 효율적인지, 규제가 공정한지, 도덕적인지 등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모두 4점 이상의 평균치를 보이고 있고,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들은 모두 4점 이하의 평균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모든 항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들은 규제의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세부적인 규제의 내용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 내용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고, 규제가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공정성도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규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현 정권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권의 세부 정책 내용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권에 대한 인식이 단지 정권만이 아니라 세부 규제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6. 규제 증가에 대한 인식

규제의 증가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지 정당에 따라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규제증가 영향 인식 차이분석 결과(정당 비교)

구분	평균	표준 편차	분산분석		차이분석		
			f값	유의 수준	t값	단측	
규제 증가 필요성	새누리	4.17	1.37	0.970	0.326	0.985	0.163
	새누리 외	4.05	1.25				
규제 증가와 발전	새누리	3.94	1.35	1.320	0.251	1.148	0.126
	새누리 외	3.78	1.49				
대기업 규제와 발전	새누리	4.13	1.34	10.580	0.001	-3.254	0.001
	새누리 외	4.55	1.32				
중소기업 규제와 발전	새누리	3.73	1.38	0.220	0.637	-0.472	0.319
	새누리 외	3.80	1.36				

규제 증가 필요성, 규제 증가와 발전에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나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식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규제 증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제가 증가하는 것이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단, 대기업에 대한 규제 증가는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새누리당 지지자나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들은 모두 대기업 규제가 발전과 연관된다고 보았는데, 특히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들이 대기업 규제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중소기업 규제는 발전에 저해된다는 것이 새누리당 지지자와 새누리당 이외 정당 지지자들의 일반적

견해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V. 결론

지금까지의 주요 결론 및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정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여당 지지자는 정부 신뢰도,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 정부의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야당 지지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둘째, 기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신뢰도, 기업의 문제 해결성, 기업의 국민에 대한 기여도,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도 여당 지지자는 긍정적인데 비해 야당 지지자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규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긍정성, 규제의 사회적 효과, 규제의 국민에 대한 기여도 등과 관련해서 여당 지지자가 야당 지지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넷째, 규제의 문제 해결 가능성, 국가 이익을 위해 개인 자유 희생 여부에 대해서도 여당 지지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야당 지지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규제에 대한 신뢰도,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효율성, 규제의 공정성, 규제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여당 지지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야당 지지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지 정당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 효율성, 효과 등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규제에 대한 인식은 정치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규제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외면적으로는 같은 규제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 규제는 정치, 정당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서 정치 및 정당과 상호 연관되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 문헌

- [1] 이현출, "한국 유권자의 정당지지 구조와 안정성," 대한정치학회보, 제12권, 제2호, pp.129-155, 2004.
- [2] 정상화, "미국 연방 의원선거의 경쟁성 연구 : 선거비용과 도전자 정당지지도, 정치적 자질 및 소속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p.75-90, 2000(3).
- [3] 김동영, "미국 남부에서의 정당지지도 변화의 의미,"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3호, pp.125-143, 2000.
- [4] 이효성, 허경호, "미디어 이용이 정치 지도자 평가와 정당지지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방송학보, 제18권, 제4호, pp.191-226, 2004.
- [5] 김희정, "주택재개발 이후 주민의 정당 지지 성향의 변화 -봉천 5동을 사례지역으로-," 지리교육논집, 제49권, pp.95-103, 2005.
- [6] 이효성, "미디어 이용이 정당 지지에 미치는 효과: 미디어 이용의 역동성 모델과 점화효과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1호, pp.285-308, 2006.
- [7] 이갑윤, 박정석, "지역민 호감도가 정당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국제정치(KWP), 제27권, 제3호, pp.131-158, 2011.
- [8] 이세희, 이종균, "SNS 사용에 따른 한국 정당지지도의 변화: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pp.186-222, 2013.
- [9] 김영태, "완도군 생일도 공동 연구 ; 민주화 이후 생일지역 선거참여와 정당, 후보지지," 도서문화, 제22권, pp.225-246, 2003.
- [10] 박기목, "정치적 이슈에 대한 신문의 보도량과 정당지지도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pp.309-328, 2005.

- [11] 서현진, 정진민, "문화적 쟁점과 미국 정당의 지지 기반 변화: 1992-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제38권, 제3호, pp.207-240, 2006.
- [12] 강경태, "경제문제와 국가안보 요인의 호주 정당 지지도에 미친 효과 분석 -2004년 호주총선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pp.137-157, 2006.
- [13] 진영재, 김민욱, "한국인의 이념성향 인식과 후보자 및 정당 지지 행태와의 상관관계: 16대 대통령선거와 17대 국회의원선거 비교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KWP), 제23권, 제4호, 2007.
- [14] 김상돈, "불평등인식, 정치성향, 정당지지가 정치향의에 미치는 영향: 국정운영불만과 국가기관불신의 매개효과분석," OUGHTOPIA, 제26권, 제1호, pp.141-171, 2011.
- [15] 지병근, "선거구 제도와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투표행태: 2010년 기초의회선거 사례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3권, 제2호, pp.185-210, 2014.
- [16] 윤종빈, 정희옥, "한국인의 정당지지와 이면에 대한 태도," 한국사회, 제15권, 제2호, pp.159-190, 2014.
- [17] 김경범, "정책대상집단의 주차규제정책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 합리적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215-226, 2015.
- [18] 최성락, "연령별 규제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586-595, 2016.
- [19] Cooper. P. *The War against Regulation, Kansas*, 2009.
- [20] Jordana and Levi-Faur, *The Politics of regulation*, Edward Elgar, 2004.
- [21] 차수봉, "헌법상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의 범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4호, pp.164-172, 2008.

저 자 소 개

최 성 락(Seong-Rak Choi)

중신회원



- 2006년 8월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양미래 대학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 정책학 일반, 규제 정책